

◆ 政府 施策 ◆

外貨表示 國産기계구입 資金 中企만 支援

— 商工部, 선정요령 개정 3천억원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새로 조성한 외화표시 원화대출 국산 기계구입자금의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됐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화표시 원화대출대상자 선정요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상공부는 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을 지원키 위해 신규자금을 중소제조업체가 구매하는 기계설비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계설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품목도 개발된 5년이내에서 92년 1월이후 개발완료된 2년이내의 국산기계로 한정했다.

국산기계 구입을 위한 외화표시 원화대출자금은 지난 92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됐으나 올들어 설비투자의 활성화로 전액소진돼 정부가 최근 3천억원을 새로 조성, 지원키로 결정했었다.

자금의 지원조건은 리보+2%, 용자기간은 8년이내로 모든 은행에서 취급한다.

이 자금의 지원대상자를 제한키로 한것은 새로 조성된 자금의 규모가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자금의 증액 취지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촉진임을 감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키로 했다.

機械類 · 部品 · 素材 國産化개발 活潑

— 商工部, 對象品目擴大 · 支援보완등 국산화사업 강화키로 —

기계류 · 부품 · 소재 국산화 개발사업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본격화 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8월중 추가로 국산화개발 대상품목을 선정, 고시하는 등 국산화사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계획의 성과로 지난해 기계류에서 537개 품목, 전기·전자에서 173개 품목, 소재에서 17개 품목등 총 727개 품목, 소재에서 17개 품목등 총 727개 품목의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연간 12억2200만달러의 수입대체와 3억5900만달러의 수출증대등 총 15억8100만달러의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상공자원부는 이처럼 국산화사업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다 최근 엔고지속으로 對日 수입이 많은 기계류,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개발이 어느때보다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 4월 올해 국산화 대상품목으로 혼기식 제트펌프등 291개 품목을 고시한데 이어 오는 8월 대상품목을 추가 고시하는 등 국산화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수입이 많은 기계류 및 핵심부품을 적극 발굴, 개발 초기단계에서 부터 양산단계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연계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개발대상 품목의 선정과 지원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기계류등의 국산개발확대 및 기술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시제품 개발자금등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산화사업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괄전담기구인 기계공업진흥회의 전산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신규개발품의 사업화지원을 위한 품질인증 및 하자보증제도등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국산화개발사업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86년이후 지금까지 기계류 3712개 품목, 전기·전자 1845개 품목, 소재 588개 품목 등 총 6145개 품목이 개발대상 품목으로 고시돼 이중 기계류 2371개, 전기·전자 794개, 소재 337개 등 총 3502개 품목의 개발에 성공, 개발성공률이 57%에 달하고 있다. 또 30.2%에 해당하는 1859개 품목이 현재 개발중에 있으며 개발포기 또는 중단된 것은 12.8%인 784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국산화로 기계 및 전기·전자류의 對日수입 비중이 91년 43.7%와 44.2%에서 작년에는 42%와 41.7%로 각각 축소돼 對日역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재부문은 對日수입 의존도가 28%에서 29%로 높아져 소재분야의 국산화개발이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외국인투자 高度技術 범위 조정

- 관련기술 시설재 도입시 100%까지 상업 借款 -

정부는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고도기술범위를 연내 전면조정해 「전략적인 고도기술」을 再선정하고 이 기술과 관련된 시설재를 도입할 경우 내년중 투자한도내에서 최고 1백%까지의 상업 借款을 허용키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수입선다변화품목을 조정, 오는 98년에는 현재의 50%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외국인투자비율 50%이상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과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조세감면 확충작업도 연내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대외경제조정 委 1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종합대책등 6개 안건을 심의,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확대와 관련, 재무부는 새로이 조정할 고도기술의 범위를 일반화된 기술은 제외하고 신기술을 추가하는 「기술별 분류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外資도입 법을 연내 개정하는등 전략고도기술수반 사업에 대한 租稅감면제도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수입선다변화품목의 연차적 축소와 관련, 매년 10%씩 줄여나가 98년에는 현재의 50%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건설부와 상공부는 또 96년에 입주가 시작될 天安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일부를 「최첨단기술산업단지」로 지정·육성하고 성과가 좋을 경우 지방과학단지로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며 최첨단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와 같은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외에 정부는 내년부터 再투자 목적의 초과유보소득세 감면을 실시하며 현행 중소기업 조정법도 개정해 外投비율 50% 이상인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날 결정사항과 관련해 조세감면 확충과 기업과세제도 개편 및 국유지 임대, 상업차관등 법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법률개정을 추진, 내년부터 실시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技術인프라에 직접 資金支援

— 商工部, 産業기술기반조성사업 내년부터 실시 —

정부는 오는 95년부터 기술인프라 구축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6년 공업발전법이 제정된 이후 공업기반기술개발 자금을 통해 기술개발사업을 벌여왔으나 UR 타결로 상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지원이 제약을 받게 됨에 따라 산업계의 기술인프라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상공부는 향후 5년동안 이 사업추진에 정부예산 4179억, 민간에서 2866억등 총 70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우선 95년중 총 40개 과제에 대해 정부가 596억원, 민간이 862억원등 총 1458억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관련 예산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정보·연구설비 등의 기반과 연구환경을 정비, 보강해 기술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고 개발된 기술을 확산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상공부가 마련한 산업기술기반추진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대학, 연구소, 제조업·광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등이 주체가 돼 △산업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 기술정보 유통사업 △연구설비 확충 및 공동연구센터 육성 △신기술보육사업, 기술지도, 표준화등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상공부는 섬유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염색가공기술인력양성사업이나 소프트웨어업계의 전문정보지를 종합적으로 유통·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산업기술정보센터사업,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파인세라믹스 파일럿 플랜트 연구·시험장비지원사업등이 여기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은 대학·연구소등 연구개발 주체에 대해 반영구적으로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지원자금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 기술개발 및 기술확산 시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구축을 가능하게 해 대학·출연연구소등의 연구개발기관간 경쟁을 촉진하고 기술개발지원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이 미흡한 기관을 기술인프라지원기관으로 전환시켜 기술개발여건을 조성토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공부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가칭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中企제품구매 競争入札로

- 재무상태 不良業體 공공工事 入札제한 -

내달부터 정부·지방자체단체·정부투자기관의 中小企業제품 구매가 생산자단체(組合)를 통한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뀐다.

또 재무상태가 불량한 업체는 공공工事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財務部에 따르면 정부는 올 7월부터 부도가 나거나 부채비율이 높은등 재무상태가 취약한 건설업체가 공공공사를 수주하면 부실공사의 위험과 공사이행의 지체가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이들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그간 도급한도액이나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특수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보유현황, 납품능력 만을 토대로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해 왔다.

정부는 또 家具등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업체의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구입해 왔으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같은 조합내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키로 했다.

地方中企 종합支援센터 設置

- 商工部, 民願·相談 원스톱서비스 제공 -

지방 중소기업의 정보 및 행정서비스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중소기업의 정보부족에 따른 애로타개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부담으로 지역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우선 내년 중 2개 지역에 설치, 운영한 후 연차적으로 전 시·도에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기업들이 이러한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중소기업지원시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데다 개발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불특정다수 중소기업에 대해 자료 및 정보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역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종합상담실을 설치하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商議등 유관기관의 직원을 파견근무시킴으로써 중소기업자의 민원이 한 곳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회계등의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배치해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센터내에 상설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고 수시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전시회를 개최, 판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간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규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입대행업무 및 외국어서비스를 실시,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CAD/CAM 등 첨단시설기자재를 임차해 설치하고 기술전문요원을 상주시켜 공동이용케 함으로써 신기술개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로 산재돼 있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지방조직을 한 곳에 모아 원루프(ONE ROOF)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 부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제공하고 건립비용은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50:50의 비율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國內外 情報 ◆

아프리카 發電 및 送電설비 市場 動向

— 우리나라 업체들도 도전해 볼 만한 시장 —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인식돼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과 정확한 情報를 바탕으로 꾸준히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을 하면 다른 시장 못지않게 충분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은 여타시장과 다를 바 없다.